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정국 블랙홀 된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총선판 '들썩'

오세훈, 김병수 만나 공식제안 예정
구리·고양·하남시 등 편입 추진
與 서병수 "경쟁력 잡아먹는 짓"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음에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11월은 예산 정국이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와중에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도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 중이다. '서울 확장론'을 내세우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잡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메가 시티 서울' 이슈가 수도권 총선 판세

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블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를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알파하고 비열한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해 이번 예산안에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여당이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선거만 바라본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레서는 안 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 "김기현·조경태, 김포서 한 번 붙어보자"

김주영·박상혁 의원 기자회견서
"교통문제 해결 없이 서울편입 주장 뿐
편입 시 뿌리기업·특례입학 불이익"

경기 김포 갑·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5일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특별시로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제일 먼

저 제안했으며,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 인근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을 이끄는 인물이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

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울산광역시(울산 남)에서만 4선을 했고 조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산 사하)에서만 5선을 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중진이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금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

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5호선이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예산도 수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

다"고 부연했다.

두 의원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 개의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김포의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의 기피 시설 김포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野 '노란봉투법' 처리 공언 vs 與 '필리버스터' 총동원령

野,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환영 뜻 밝혀
與, 방송3법 필리버스터로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는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정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

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26일 기각됐다.

민주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과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전하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

자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60여명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1인당 3시간, 최소 15명 이상 참여하게 하면서 표결 지연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